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1. 11.

KBIZ 중소기업중앙회

차 례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2
4) 응답자 특성	2

II 조사 결과

1)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3
1-1) 불공정거래 유형	5
1-2) 불공정거래 대처 방법	7
2) 불공정거래 대처 어려운 점	9
3)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	11
4)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13
5) 지원지금을 통한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내용	15
6) 불공정한 부당특약 종류	17
7) 부당특약 요구시 대응 방법	19
8)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시 중소기업 도움 정도	21
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 정도	23
9-1) 도움이 안되는 이유	25
10)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7
11) 동의의결제도 피해자 구제 도움 정도	29
12)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	31
13) 동의의결제도 도입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33

14) 조사 소멸시효 확대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35
15) 현행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소멸시효 적정의견	37
16)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피해지원 원할 의견	39
17)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시 중요한 점	41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발시 관련 대기업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징금 부과 등 벌칙 적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의 제재조치로 인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보전은 불가능하며, 피해 중소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피해액 청구 및 수취가 가능함
- 전담 법률 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최종선고 때까지 기다리며 추가 손해도 발생하는 이중고가 발생
-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개요

〈표 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중소기업
2) 표본수	500개사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른 전화 조사
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66%
5) 조사기간	2021. 10. 15 ~ 11. 10
6) 조사기관	(주)메가알앤씨

3) 조사 내용

〈표 2〉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비고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불공정거래 유형	
	불공정거래 대처 방법	
	불공정거래 대처 어려운 점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기금 설치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지원기금을 통한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당특약설정 무효화 관련	불공정한 부당특약 종류	
	부당특약 요구시 대응 방법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시 중소기업 도움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동의를결 제도 관련	동의를결제도 피해자 구제 도움 정도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	
	동의를결제도 도입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조사 소멸시효 관련	조사 소멸시효 확대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현행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소멸시효 적정 의견	
	불공정거래로 인한 적정 소멸시효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 지원 정책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피해지원 원활 의견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시 중요한 점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4) 응답자 특성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 응답자 특성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00)	36.4	63.6	
주력업종	화학	(57)	45.6	54.4
	고무/플라스틱	(6)	33.3	66.7
	금속/비금속	(87)	36.8	63.2
	전기/전자	(76)	17.1	82.9
	기계/설비	(205)	46.3	53.7
	자동차	(33)	21.2	78.8
	조선	(3)	0.0	100.0
	기타	(33)	21.2	78.8
매출액	10억 미만	(83)	33.7	66.3
	10~20억 미만	(119)	39.5	60.5
	20~40억 미만	(98)	36.7	63.3
	40~100억 미만	(114)	26.3	73.7
	100억 이상	(86)	47.7	52.3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28.1	71.9
	10~20명 미만	(196)	36.2	63.8
	20~30명 미만	(92)	37.0	63.0
	30명 이상	(123)	42.3	57.7

Ⅱ 조사 결과

□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관련

1)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6.4%, 경험이 없다는 63.6%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기계/설비(46.3%), 화학(45.6%)에서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모든 매출액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지만 100억 이상에서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표 4〉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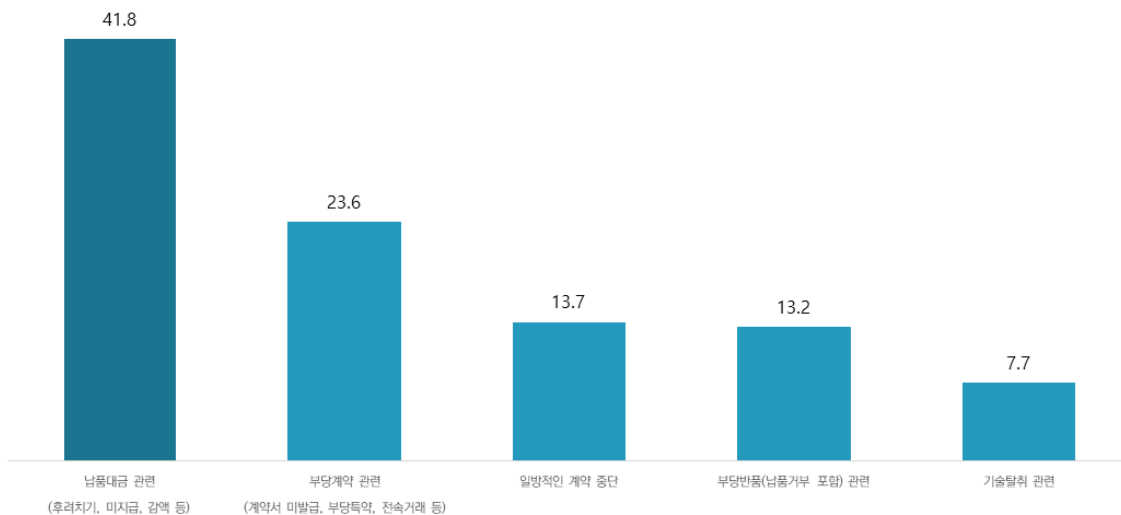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500)	36.4	63.6	
주력업종	화학	(57)	45.6	54.4
	고무/플라스틱	(6)	33.3	66.7
	금속/비금속	(87)	36.8	63.2
	전기/전자	(76)	17.1	82.9
	기계/설비	(205)	46.3	53.7
	자동차	(33)	21.2	78.8
	조선	(3)	0.0	100.0
	기타	(33)	21.2	78.8
매출액	10억 미만	(83)	33.7	66.3
	10~20억 미만	(119)	39.5	60.5
	20~40억 미만	(98)	36.7	63.3
	40~100억 미만	(114)	26.3	73.7
	100억 이상	(86)	47.7	52.3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28.1	71.9
	10~20명 미만	(196)	36.2	63.8
	20~30명 미만	(92)	37.0	63.0
	30명 이상	(123)	42.3	57.7

1-1) 불공정거래 유형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n=182)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납품대금 관련(후려치기, 미지급, 감액 등)에 대한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계약 관련(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전속거래 등)(23.6%), 일방적인 계약중단(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납품대금 관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무/플라스틱, 기타에서는 납품대금 관련과 부당계약 관련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매출액에서 납품대금 관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100억 미만에서는 납품대금 관련과 일방적인 계약 중단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종업원 수에서 납품대금 관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 미만에서 다른 종업원 수 대비 6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n=182, 단위: 개, %]



[그림 2] 불공정거래 유형

〈표 5〉 불공정거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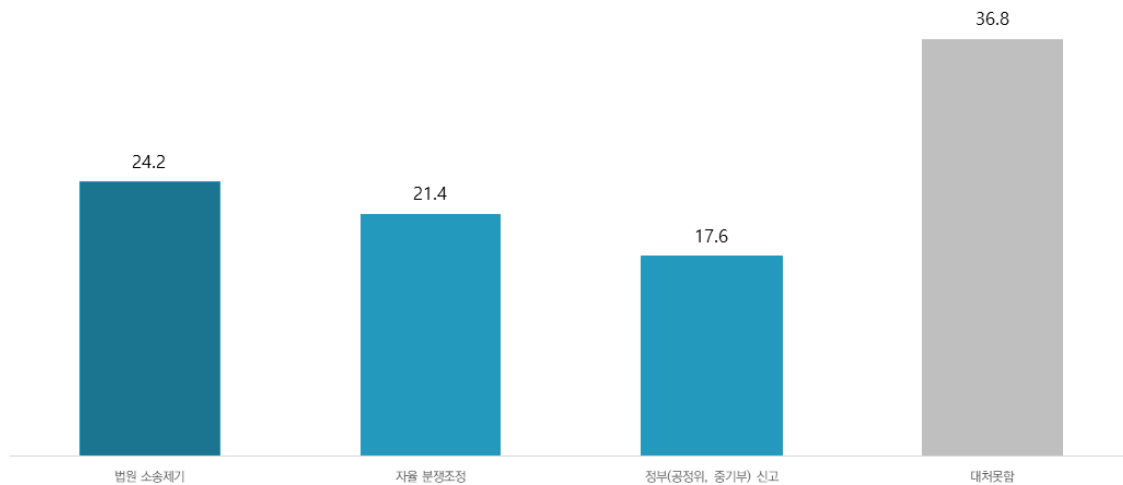
[Base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n=182,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납품대금 관련(우려치기, 미지급, 감액 등)	부당계약 관련(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전속거래 등)	일방적인 계약 중단	부당반품(납품거부 포함) 관련	기술탈취 관련	
[전 체]	(182)	41.8	23.6	13.7	13.2	7.7	
주력업종	화학	(26)	42.3	23.1	11.5	15.4	7.7
	고무/플라스틱	(2)	50.0	50.0	0.0	0.0	0.0
	금속/비금속	(32)	40.6	15.6	9.4	31.3	3.1
	전기/전자	(13)	61.5	23.1	15.4	0.0	0.0
	기계/설비	(95)	40.0	26.3	16.8	8.4	8.4
	자동차	(7)	42.9	14.3	0.0	14.3	28.6
	기타	(7)	28.6	28.6	14.3	14.3	14.3
매출액	10억 미만	(28)	46.4	25.0	17.9	3.6	7.1
	10~20억 미만	(47)	40.4	23.4	17.0	10.6	8.5
	20~40억 미만	(36)	47.2	25.0	5.6	11.1	11.1
	40~100억 미만	(30)	26.7	16.7	26.7	20.0	10.0
	100억 이상	(41)	46.3	26.8	4.9	19.5	2.4
종업원 수	10명 미만	(25)	60.0	28.0	4.0	4.0	4.0
	10~20명 미만	(71)	40.8	21.1	18.3	12.7	7.0
	20~30명 미만	(34)	35.3	23.5	17.6	5.9	17.6
	30명 이상	(52)	38.5	25.0	9.6	23.1	3.8

1-2) 불공정거래 대처 방법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n=182)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대처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처못함에 대한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원 소송제기(24.2%), 자율 분쟁조정(21.4%), 정부(공정위, 중기부) 신고(17.6%)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기타에서 대처못함에 대한 응답이 다른 업종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법원 소송제기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20~30명 미만에서 대처못함에 대한 응답이 다른 종업원 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n=182, 단위: 개, %]



[그림 3] 불공정거래 대처 방법

〈표 6〉 불공정거래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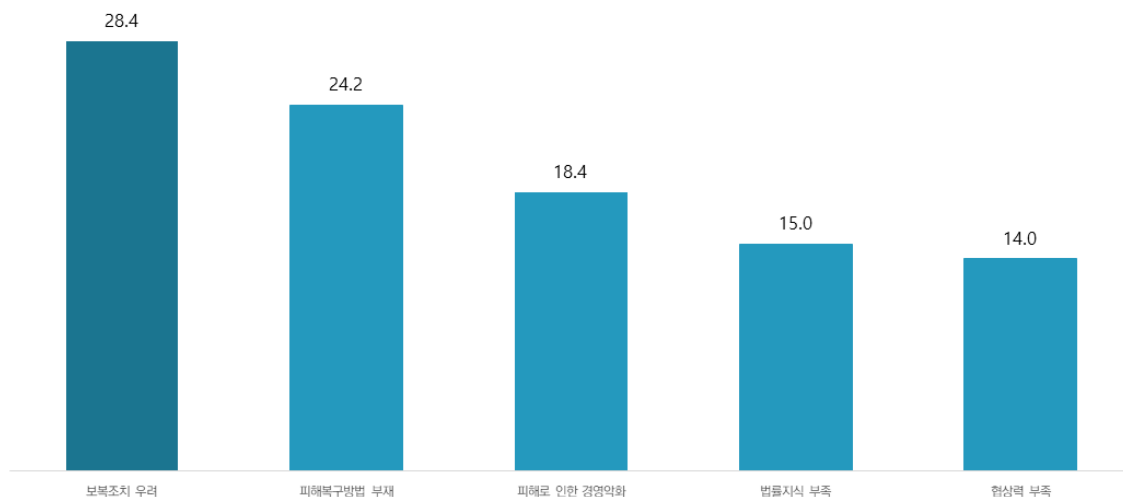
[Base :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n=182,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법원 소송제기	자율 분쟁조정	정부(공정위, 중기부) 신고	대처못함	
[전 체]	(182)	24.2	21.4	17.6	36.8	
주력업종	화학	(26)	42.3	15.4	11.5	30.8
	고무/플라스틱	(2)	100.0	0.0	0.0	0.0
	금속/비금속	(32)	12.5	25.0	31.3	31.3
	전기/전자	(13)	30.8	7.7	23.1	38.5
	기계/설비	(95)	20.0	24.2	15.8	40.0
	자동차	(7)	42.9	0.0	14.3	42.9
	기타	(7)	14.3	42.9	0.0	42.9
매출액	10억 미만	(28)	17.9	17.9	17.9	46.4
	10~20억 미만	(47)	17.0	29.8	17.0	36.2
	20~40억 미만	(36)	22.2	19.4	13.9	44.4
	40~100억 미만	(30)	26.7	10.0	20.0	43.3
	100억 이상	(41)	36.6	24.4	19.5	19.5
종업원 수	10명 미만	(25)	28.0	24.0	20.0	28.0
	10~20명 미만	(71)	25.4	21.1	15.5	38.0
	20~30명 미만	(34)	11.8	20.6	17.6	50.0
	30명 이상	(52)	28.8	21.2	19.2	30.8

2) 불공정거래 대처 어려운 점

- 불공정거래 대처 어려운 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복조치 우려에 대한 응답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복구방법 부재(24.2%), 피해로 인한 경영악화(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보복조치 우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무/플라스틱에서는 피해복구방법 부재와 법률지식 부족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매출액에서 보복조치 우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억 미만에서는 피해복구방법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복조치 우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30명 미만에서 피해복구방법 부재, 피해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한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4] 불공정거래 대처시 어려운 점

〈표 7〉 불공정거래 대처 어려운 점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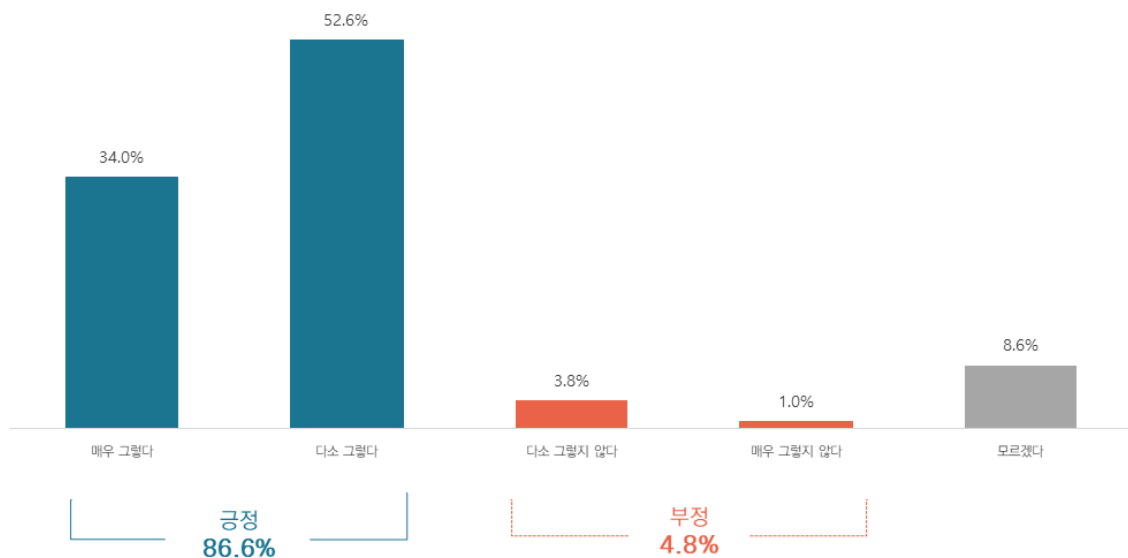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보복조치 우려	피해복구 방법 부재	피해로 인한 경영악화	법률지식 부족	협상력 부족	
[전 체]	(500)	28.4	24.2	18.4	15.0	14.0	
주력업종	화학	(57)	31.6	26.3	14.0	17.5	10.5
	고무/플라스틱	(6)	16.7	33.3	0.0	33.3	16.7
	금속/비금속	(87)	27.6	20.7	16.1	20.7	14.9
	전기/전자	(76)	27.6	19.7	19.7	18.4	14.5
	기계/설비	(205)	27.8	26.3	20.5	10.7	14.6
	자동차	(33)	24.2	24.2	21.2	9.1	21.2
	조선	(3)	33.3	33.3	33.3	0.0	0.0
	기타	(33)	36.4	24.2	15.2	18.2	6.1
매출액	10억 미만	(83)	27.7	20.5	22.9	13.3	15.7
	10~20억 미만	(119)	19.3	31.1	16.0	21.0	12.6
	20~40억 미만	(98)	26.5	24.5	22.4	13.3	13.3
	40~100억 미만	(114)	36.8	21.1	14.9	12.3	14.9
	100억 이상	(86)	32.6	22.1	17.4	14.0	14.0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32.6	22.5	20.2	12.4	12.4
	10~20명 미만	(196)	26.5	26.0	15.3	16.3	15.8
	20~30명 미만	(92)	23.9	29.3	29.3	10.9	6.5
	30명 이상	(123)	31.7	18.7	13.8	17.9	17.9

□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기금 설치 관련

3)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

-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에 대해 물어본 결과, 활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6.6%, 활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4.8%, 모르겠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남
-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그렇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34.0%), 모르겠다(8.6%), 다소 그렇지 않다(3.8%), 매우 그렇지 않다(1.0%) 순으로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10명 미만에서 수취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5]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

〈표 8〉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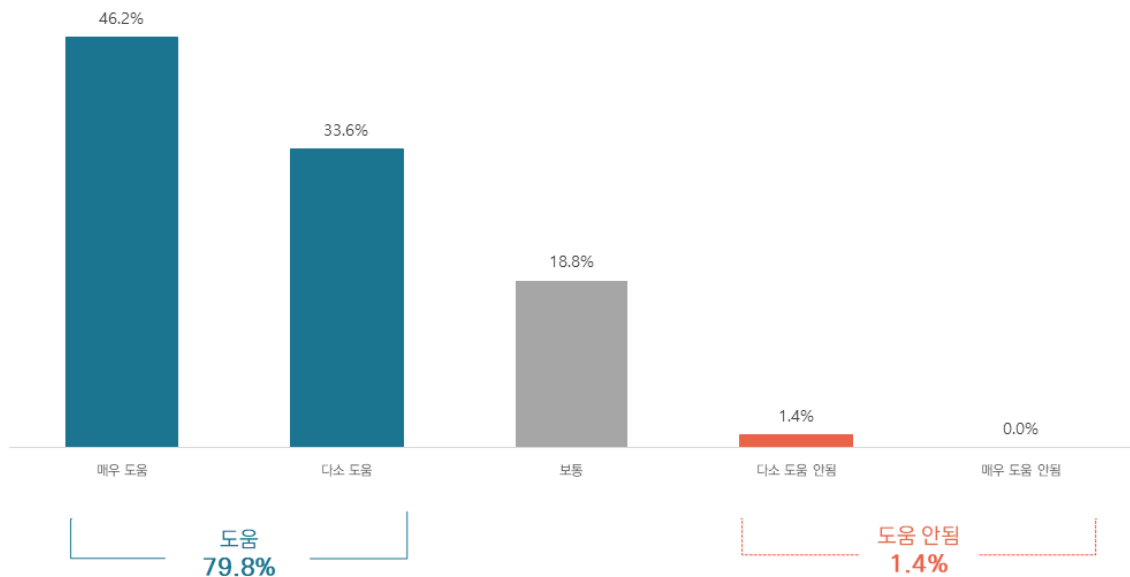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긍정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 체]	(500)	86.6	34.0	52.6	3.8	1.0	4.8	8.6	
주력업종	화학	(57)	89.5	33.3	56.1	3.5	0.0	3.5	7.0
	고무/플라스틱	(6)	83.3	16.7	66.7	0.0	0.0	0.0	16.7
	금속/비금속	(87)	86.2	40.2	46.0	2.3	1.1	3.4	10.3
	전기/전자	(76)	88.2	34.2	53.9	3.9	0.0	3.9	7.9
	기계/설비	(205)	85.9	31.7	54.1	4.9	1.5	6.3	7.8
	자동차	(33)	81.8	36.4	45.5	6.1	0.0	6.1	12.1
	조선	(3)	66.7	33.3	33.3	0.0	0.0	0.0	33.3
	기타	(33)	90.9	33.3	57.6	0.0	3.0	3.0	6.1
매출액	10억 미만	(83)	90.4	34.9	55.4	2.4	1.2	3.6	6.0
	10~20억 미만	(119)	88.2	29.4	58.8	4.2	1.7	5.9	5.9
	20~40억 미만	(98)	85.7	32.7	53.1	3.1	1.0	4.1	10.2
	40~100억 미만	(114)	82.5	43.0	39.5	6.1	0.9	7.0	10.5
	100억 이상	(86)	87.2	29.1	58.1	2.3	0.0	2.3	10.5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92.1	44.9	47.2	2.2	0.0	2.2	5.6
	10~20명 미만	(196)	88.8	30.6	58.2	3.6	1.0	4.6	6.6
	20~30명 미만	(92)	76.1	26.1	50.0	7.6	3.3	10.9	13.0
	30명 이상	(123)	87.0	37.4	49.6	2.4	0.0	2.4	10.6

4)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8%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1.4%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도움 (33.6%), 보통(18.8%), 다소 도움 안됨(1.4%), 매우 도움 안됨(0.0%)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에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6]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표 9〉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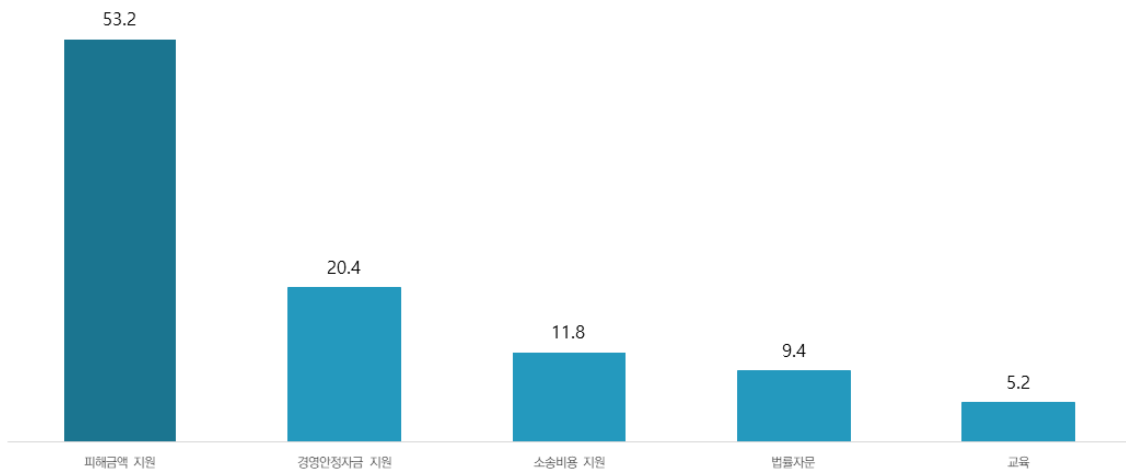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다소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전 체]	(500)	79.8	46.2	33.6	18.8	1.4	0.0	1.4	
주력업종	화학	(57)	80.7	49.1	31.6	15.8	3.5	0.0	3.5
	고무/플라스틱	(6)	66.7	16.7	50.0	33.3	0.0	0.0	0.0
	금속/비금속	(87)	82.8	55.2	27.6	16.1	1.1	0.0	1.1
	전기/전자	(76)	77.6	44.7	32.9	21.1	1.3	0.0	1.3
	기계/설비	(205)	81.5	43.9	37.6	17.1	1.5	0.0	1.5
	자동차	(33)	69.7	45.5	24.2	30.3	0.0	0.0	0.0
	조선	(3)	100.0	33.3	66.7	0.0	0.0	0.0	0.0
	기타	(33)	75.8	42.4	33.3	24.2	0.0	0.0	0.0
매출액	10억 미만	(83)	85.5	51.8	33.7	14.5	0.0	0.0	0.0
	10~20억 미만	(119)	82.4	40.3	42.0	16.8	0.8	0.0	0.8
	20~40억 미만	(98)	79.6	45.9	33.7	18.4	2.0	0.0	2.0
	40~100억 미만	(114)	73.7	48.2	25.4	24.6	1.8	0.0	1.8
	100억 이상	(86)	79.1	46.5	32.6	18.6	2.3	0.0	2.3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83.1	62.9	20.2	14.6	2.2	0.0	2.2
	10~20명 미만	(196)	82.1	42.3	39.8	17.3	0.5	0.0	0.5
	20~30명 미만	(92)	73.9	33.7	40.2	21.7	4.3	0.0	4.3
	30명 이상	(123)	78.0	49.6	28.5	22.0	0.0	0.0	0.0

5) 지원기금을 통한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금을 통한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피해금액 지원에 대한 응답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안정자금 지원(20.4%), 소송비용 지원(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20~40억 미만에서 피해금액 지원에 대한 응답이 45.9%로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20~30명 미만에서 피해금액 지원에 대한 응답이 39.1%로 다른 종업원 수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7] 지원기금을 통한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내용

〈표 10〉 지원기금을 통한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내용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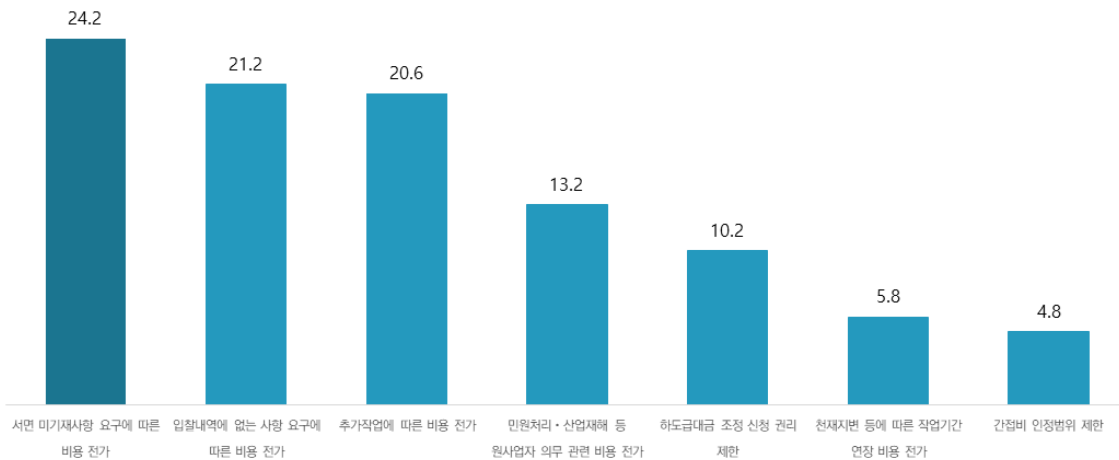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피해금액 지원	경영안정 자금 지원	소송비용 지원	법률자문	교육	
[전 체]	(500)	53.2	20.4	11.8	9.4	5.2	
주력업종	화학	(57)	56.1	28.1	8.8	3.5	3.5
	고무/플라스틱	(6)	50.0	16.7	33.3	0.0	0.0
	금속/비금속	(87)	49.4	16.1	14.9	12.6	6.9
	전기/전자	(76)	46.1	23.7	17.1	10.5	2.6
	기계/설비	(205)	56.6	20.5	7.8	9.8	5.4
	자동차	(33)	48.5	21.2	21.2	6.1	3.0
	조선	(3)	66.7	33.3	0.0	0.0	0.0
	기타	(33)	57.6	9.1	9.1	12.1	12.1
매출액	10억 미만	(83)	55.4	19.3	8.4	14.5	2.4
	10~20억 미만	(119)	53.8	16.8	10.1	9.2	10.1
	20~40억 미만	(98)	45.9	22.4	15.3	12.2	4.1
	40~100억 미만	(114)	56.1	21.9	13.2	4.4	4.4
	100억 이상	(86)	54.7	22.1	11.6	8.1	3.5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56.2	18.0	7.9	13.5	4.5
	10~20명 미만	(196)	59.7	16.8	11.2	8.2	4.1
	20~30명 미만	(92)	39.1	27.2	15.2	12.0	6.5
	30명 이상	(123)	51.2	22.8	13.0	6.5	6.5

□ 부당특약설정 무효화 관련

6) 불공정한 부당특약 종류

- 불공정한 부당특약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서면 미기재사항 요구에 따른 비용 전가에 대한 응답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에 따른 비용 전가(21.2%), 추가작업에 따른 비용 전가(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에서 서면 미기재사항 요구에 따른 비용 전가에 대한 응답이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서면 미기재사항 요구에 따른 비용 전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명 미만에서는 추가 잔업에 따른 비용 전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8] 불공정한 부당특약 종류

〈표 11〉 불공정한 부당특약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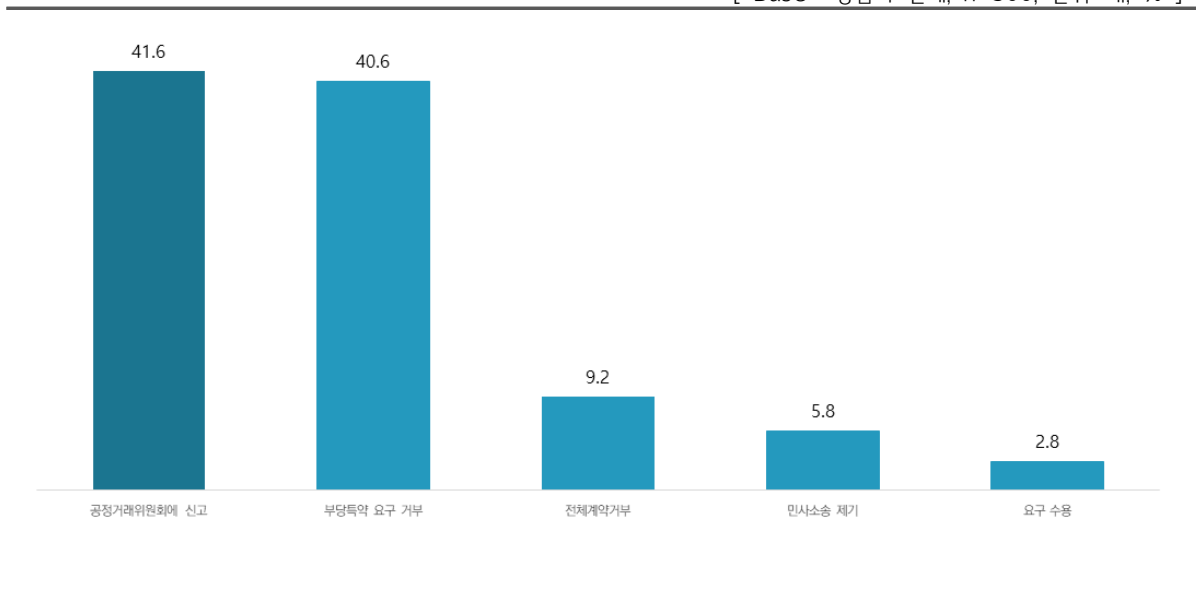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서면 미기재 사항 요구에 따른 비용 전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에 따른 비용 전가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 전가	민원처 리·산 업재해 등 원사 업자 의 무 관련 비용 전 가	하도급 대금 조 정 신청 권리 제 한	천재지 변 등에 따른 작 업기간 연장 비 용 전가	간접비 인정범 위 제한	
[전 체]	(500)	24.2	21.2	20.6	13.2	10.2	5.8	4.8	
주력업종	화학	(57)	31.6	21.1	22.8	7.0	12.3	5.3	0.0
	고무/플라스틱	(6)	50.0	50.0	0.0	0.0	0.0	0.0	0.0
	금속/비금속	(87)	23.0	24.1	20.7	16.1	8.0	4.6	3.4
	전기/전자	(76)	17.1	15.8	25.0	17.1	6.6	13.2	5.3
	기계/설비	(205)	22.0	23.9	21.0	9.3	13.2	4.4	6.3
	자동차	(33)	39.4	15.2	15.2	18.2	6.1	6.1	0.0
	조선	(3)	33.3	33.3	33.3	0.0	0.0	0.0	0.0
기타	(33)	24.2	9.1	12.1	30.3	9.1	3.0	12.1	
매출액	10억 미만	(83)	24.1	32.5	16.9	14.5	6.0	2.4	3.6
	10~20억 미만	(119)	17.6	17.6	19.3	15.1	16.8	6.7	6.7
	20~40억 미만	(98)	25.5	19.4	20.4	12.2	8.2	7.1	7.1
	40~100억 미만	(114)	25.4	24.6	20.2	12.3	10.5	5.3	1.8
	100억 이상	(86)	30.2	12.8	26.7	11.6	7.0	7.0	4.7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23.6	19.1	15.7	22.5	11.2	2.2	5.6
	10~20명 미만	(196)	20.9	21.4	26.5	10.2	10.7	5.6	4.6
	20~30명 미만	(92)	29.3	25.0	13.0	10.9	8.7	7.6	5.4
	30명 이상	(123)	26.0	19.5	20.3	13.0	9.8	7.3	4.1

7) 부당특약 요구시 대응 방법

- 부당특약 요구시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에 대한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특약 요구 거부(40.6%), 전체계약거부(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 고무/플라스틱, 자동차에서는 부당특약 요구 거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전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와 부당특약 요구 거부에 대한 응답이 일하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전체계약거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9] 부당특약 요구시 대응 방법

〈표 12〉 부당특약 요구시 대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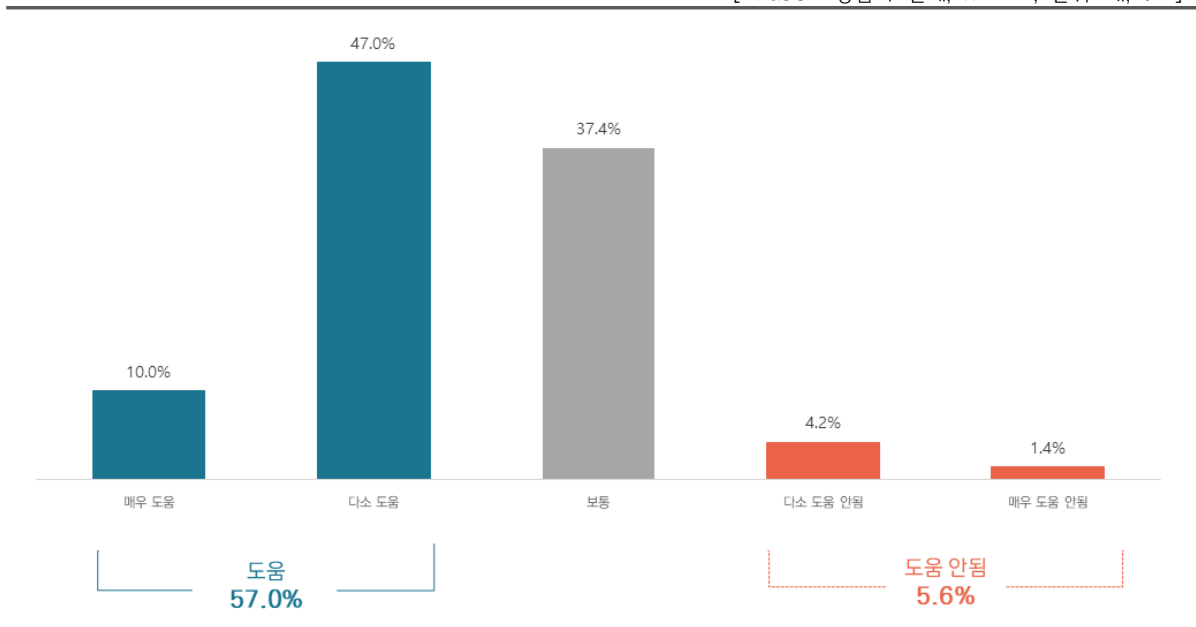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	부당특약 요구 거부	전체계약 거부	민사소송 제기	요구 수용	
[전 체]	(500)	41.6	40.6	9.2	5.8	2.8	
주력업종	화학	(57)	36.8	42.1	10.5	7.0	3.5
	고무/플라스틱	(6)	33.3	66.7	0.0	0.0	0.0
	금속/비금속	(87)	41.4	40.2	5.7	9.2	3.4
	전기/전자	(76)	42.1	42.1	6.6	3.9	5.3
	기계/설비	(205)	41.0	40.5	10.2	5.9	2.4
	자동차	(33)	42.4	48.5	9.1	0.0	0.0
	조선	(3)	100.0	0.0	0.0	0.0	0.0
	기타	(33)	48.5	27.3	18.2	6.1	0.0
매출액	10억 미만	(83)	45.8	45.8	6.0	2.4	0.0
	10~20억 미만	(119)	37.8	38.7	9.2	10.1	4.2
	20~40억 미만	(98)	48.0	39.8	5.1	4.1	3.1
	40~100억 미만	(114)	43.0	36.8	13.2	5.3	1.8
	100억 이상	(86)	33.7	44.2	11.6	5.8	4.7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41.6	46.1	6.7	5.6	0.0
	10~20명 미만	(196)	44.4	38.8	8.2	7.7	1.0
	20~30명 미만	(92)	50.0	30.4	8.7	2.2	8.7
	30명 이상	(123)	30.9	47.2	13.0	5.7	3.3

8)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시 중소기업 도움 정도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시 중소기업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7.0%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소 도움이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37.4%), 매우 도움(10.0%), 다소 도움 안됨(4.2%), 매우 도움 안됨(1.4%)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0]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시 중소기업 도움 정도

〈표 13〉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시 중소기업 도움 정도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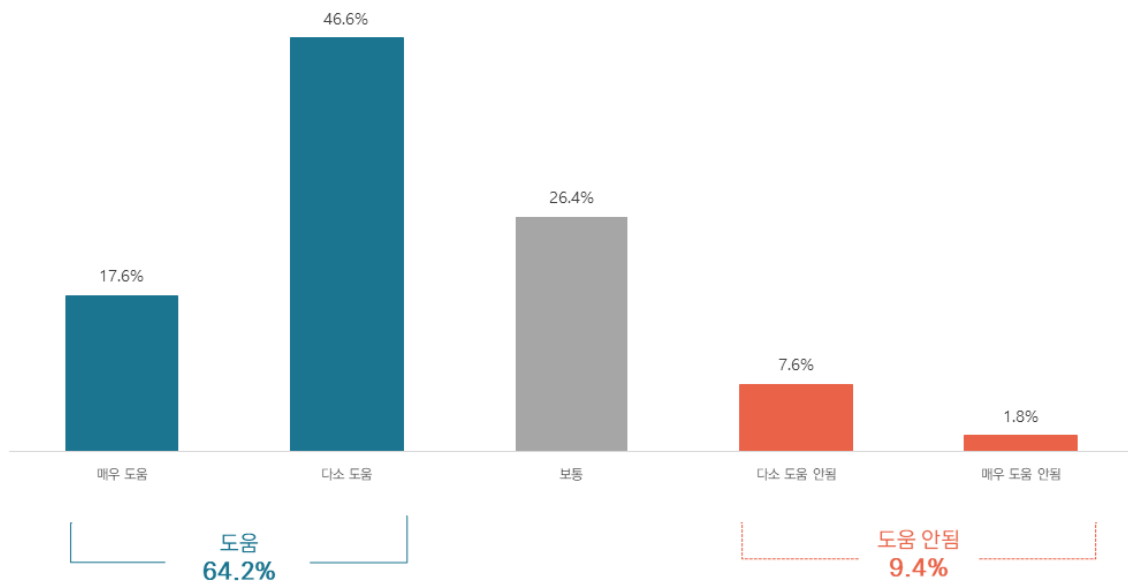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다소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전 체]	(500)	57.0	10.0	47.0	37.4	4.2	1.4	5.6	
주력업종	화학	(57)	64.9	10.5	54.4	31.6	1.8	1.8	3.5
	고무/플라스틱	(6)	66.7	0.0	66.7	33.3	0.0	0.0	0.0
	금속/비금속	(87)	56.3	13.8	42.5	35.6	5.7	2.3	8.0
	전기/전자	(76)	56.6	6.6	50.0	40.8	2.6	0.0	2.6
	기계/설비	(205)	55.1	9.3	45.9	40.0	3.9	1.0	4.9
	자동차	(33)	51.5	9.1	42.4	45.5	3.0	0.0	3.0
	조선	(3)	33.3	0.0	33.3	33.3	0.0	33.3	33.3
	기타	(33)	63.6	15.2	48.5	21.2	12.1	3.0	15.2
매출액	10억 미만	(83)	65.1	6.0	59.0	26.5	8.4	0.0	8.4
	10~20억 미만	(119)	58.8	12.6	46.2	34.5	4.2	2.5	6.7
	20~40억 미만	(98)	58.2	10.2	48.0	36.7	5.1	0.0	5.1
	40~100억 미만	(114)	48.2	7.9	40.4	47.4	2.6	1.8	4.4
	100억 이상	(86)	57.0	12.8	44.2	39.5	1.2	2.3	3.5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59.6	6.7	52.8	32.6	7.9	0.0	7.9
	10~20명 미만	(196)	59.2	10.2	49.0	36.7	2.6	1.5	4.1
	20~30명 미만	(92)	51.1	13.0	38.0	41.3	7.6	0.0	7.6
	30명 이상	(123)	56.1	9.8	46.3	39.0	1.6	3.3	4.9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 정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소 도움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26.4%), 매우 도움(17.6%), 다소 도움 안됨(7.6%), 매우 도움 안됨(1.8%)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에서 72.4%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10억~20억 미만에서 도움 안됨에 대한 응답이 14.3%로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 정도

〈표 1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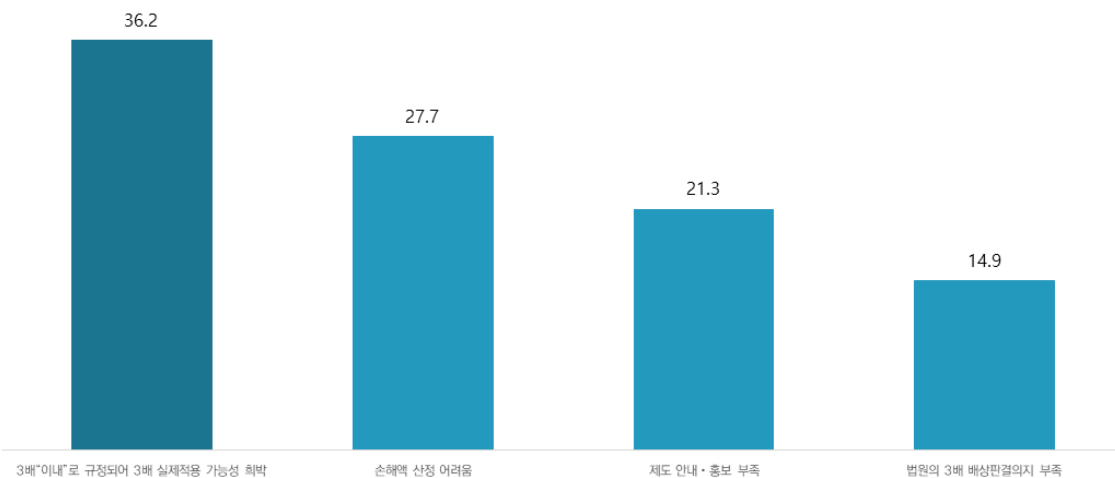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도움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다소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전 체]	(500)	64.2	17.6	46.6	26.4	7.6	1.8	9.4	
주력업종	화학	(57)	57.9	12.3	45.6	33.3	5.3	3.5	8.8
	고무/플라스틱	(6)	66.7	16.7	50.0	16.7	16.7	0.0	16.7
	금속/비금속	(87)	64.4	18.4	46.0	25.3	9.2	1.1	10.3
	전기/전자	(76)	72.4	27.6	44.7	25.0	1.3	1.3	2.6
	기계/설비	(205)	62.4	13.7	48.8	25.4	9.8	2.4	12.2
	자동차	(33)	63.6	12.1	51.5	27.3	9.1	0.0	9.1
	조선	(3)	33.3	0.0	33.3	66.7	0.0	0.0	0.0
	기타	(33)	69.7	33.3	36.4	24.2	6.1	0.0	6.1
매출액	10억 미만	(83)	55.4	13.3	42.2	34.9	6.0	3.6	9.6
	10~20억 미만	(119)	63.9	16.0	47.9	21.8	12.6	1.7	14.3
	20~40억 미만	(98)	75.5	21.4	54.1	19.4	5.1	0.0	5.1
	40~100억 미만	(114)	64.0	21.9	42.1	29.8	4.4	1.8	6.1
	100억 이상	(86)	60.5	14.0	46.5	27.9	9.3	2.3	11.6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52.8	13.5	39.3	37.1	7.9	2.2	10.1
	10~20명 미만	(196)	65.8	14.3	51.5	25.0	7.1	2.0	9.2
	20~30명 미만	(92)	69.6	20.7	48.9	26.1	2.2	2.2	4.3
	30명 이상	(123)	65.9	23.6	42.3	21.1	12.2	0.8	13.0

9-1) 도움이 안 되는 이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움 안 된다는 기업(n=47)을 대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3배 “이내”로 규정되어 3배 실제적용 가능성 희박에 대한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적 산정 어려움(27.7%), 제도안내·홍보 부족(21.3%), 법원의 3배 배상판결의지 부족(14.9%)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100억 이상에서 제도 안내·홍보 부족에 대한 응답이 50.0%로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제도 안내·홍보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이 크고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제도 안내·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Base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움 안 된다는 기업, n=47, 단위: 개, %]



[그림 12] 도움이 안 되는 이유

〈표 15〉 도움이 안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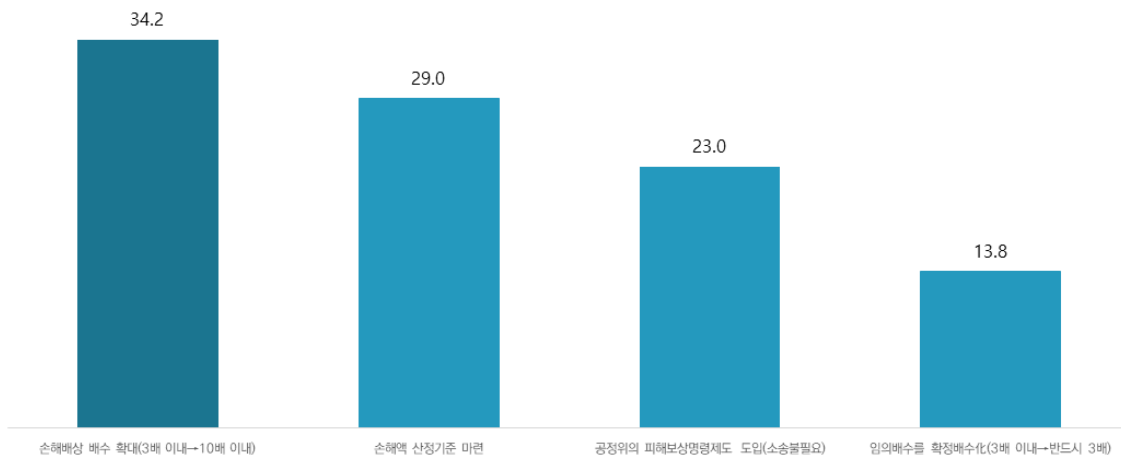
[Base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움 안 된다는 기업, n=47,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3배"이내"로 규정되어 3배 실제적용 가능성 희박	손해액 산정 어려움	제도 안내· 홍보 부족	법원의 3배 배상판결의지 부족	
[전 체]	(47)	36.2	27.7	21.3	14.9	
주력업종	화학	(5)	40.0	40.0	0.0	20.0
	고무/플라스틱	(1)	0.0	0.0	0.0	100.0
	금속/비금속	(9)	33.3	33.3	33.3	0.0
	전기/전자	(2)	0.0	50.0	50.0	0.0
	기계/설비	(25)	40.0	28.0	20.0	12.0
	자동차	(3)	33.3	0.0	0.0	66.7
	기타	(2)	50.0	0.0	50.0	0.0
매출액	10억 미만	(8)	62.5	25.0	0.0	12.5
	10~20억 미만	(17)	23.5	29.4	29.4	17.6
	20~40억 미만	(5)	40.0	40.0	0.0	20.0
	40~100억 미만	(7)	71.4	14.3	0.0	14.3
	100억 이상	(10)	10.0	30.0	50.0	10.0
종업원 수	10명 미만	(9)	44.4	44.4	0.0	11.1
	10~20명 미만	(18)	44.4	22.2	16.7	16.7
	20~30명 미만	(4)	50.0	0.0	25.0	25.0
	30명 이상	(16)	18.8	31.3	37.5	12.5

10)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손해배상 배수 확대(3배 이내 → 10배 이내)에 대한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29.0%), 공정위의 피해보상명령제도 도입(소송불필요)(23.0%), 임의배수를 확정배수화 3배 이내 → 반드시 3배)(13.8%)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손해배상 배수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무/플라스틱, 기계/설비, 기타에서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3]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표 16〉 바람직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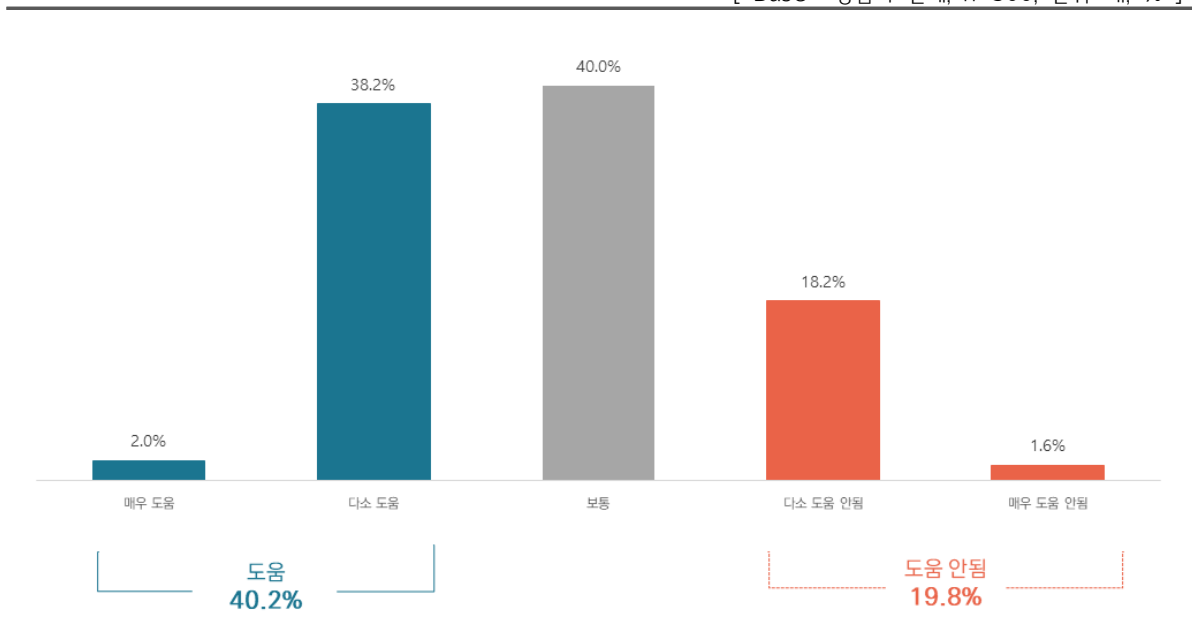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손해배상 배수 확대(3배 이내 →10배 이내)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공정위의 피해 보상명령제도 도입 (소송불필요)	임의배수를 확 정배수화 (3배 이내→ 반드시 3배)	
[전체]	(500)	34.2	29.0	23.0	13.8	
주력업종	화학	(57)	33.3	24.6	29.8	12.3
	고무/플라스틱	(6)	16.7	50.0	0.0	33.3
	금속/비금속	(87)	37.9	27.6	18.4	16.1
	전기/전자	(76)	48.7	21.1	21.1	9.2
	기계/설비	(205)	28.3	31.7	28.3	11.7
	자동차	(33)	36.4	21.2	18.2	24.2
	조선	(3)	66.7	0.0	33.3	0.0
	기타	(33)	27.3	48.5	3.0	21.2
매출액	10억 미만	(83)	28.9	37.3	19.3	14.5
	10~20억 미만	(119)	27.7	33.6	24.4	14.3
	20~40억 미만	(98)	35.7	29.6	17.3	17.3
	40~100억 미만	(114)	46.5	20.2	20.2	13.2
	100억 이상	(86)	30.2	25.6	34.9	9.3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38.2	31.5	18.0	12.4
	10~20명 미만	(196)	30.1	31.6	23.5	14.8
	20~30명 미만	(92)	33.7	30.4	22.8	13.0
	30명 이상	(123)	38.2	22.0	26.0	13.8

□ 동의의결 제도 관련

11) 동의의결제도 피해자 구제 도움 정도

- 동의의결제도 피해자 구제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2%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19.8%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도움(38.2%), 다소 도움 안됨(18.2%), 매우 도움(2.0%), 매우 도움 안됨(1.6%)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모든 매출액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0~20억 미만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4] 동의의결제도 피해자 구제 도움 정도

〈표 17〉 동의를결제도 피해자 구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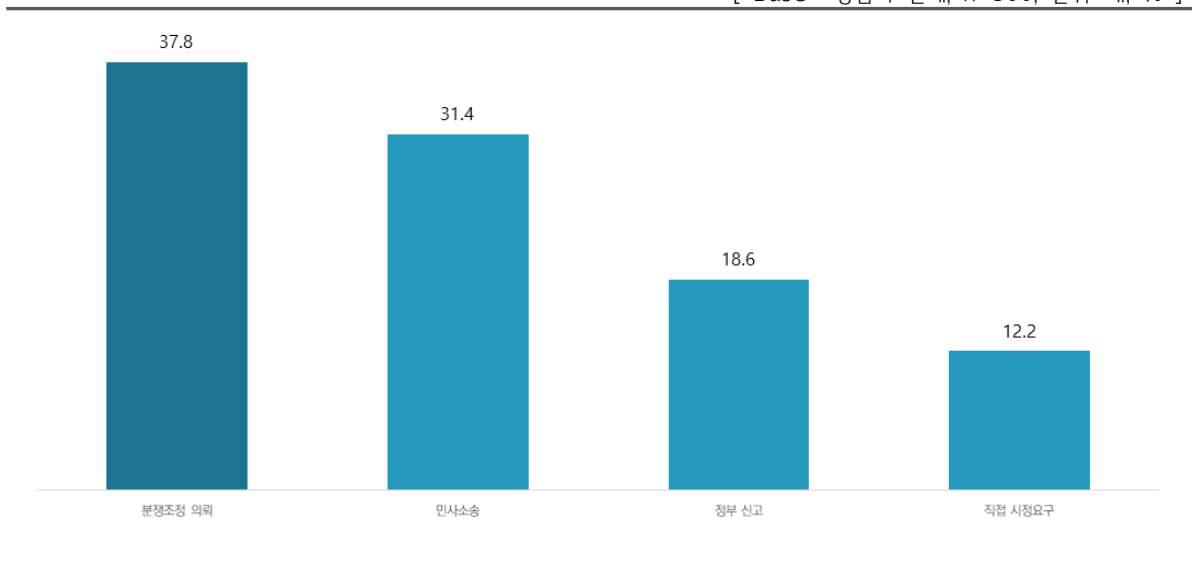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다소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전 체]	(500)	40.2	2.0	38.2	40.0	18.2	1.6	19.8	
주력업종	화학	(57)	28.1	0.0	28.1	50.9	17.5	3.5	21.1
	고무/플라스틱	(6)	33.3	0.0	33.3	50.0	16.7	0.0	16.7
	금속/비금속	(87)	43.7	2.3	41.4	35.6	17.2	3.4	20.7
	전기/전자	(76)	47.4	6.6	40.8	39.5	11.8	1.3	13.2
	기계/설비	(205)	41.0	1.5	39.5	38.5	20.0	0.5	20.5
	자동차	(33)	36.4	0.0	36.4	48.5	15.2	0.0	15.2
	조선	(3)	0.0	0.0	0.0	33.3	33.3	33.3	66.7
	기타	(33)	39.4	0.0	39.4	33.3	27.3	0.0	27.3
매출액	10억 미만	(83)	47.0	2.4	44.6	33.7	16.9	2.4	19.3
	10~20억 미만	(119)	37.8	2.5	35.3	42.0	19.3	0.8	20.2
	20~40억 미만	(98)	39.8	0.0	39.8	48.0	12.2	0.0	12.2
	40~100억 미만	(114)	36.0	2.6	33.3	42.1	20.2	1.8	21.9
	100억 이상	(86)	43.0	2.3	40.7	31.4	22.1	3.5	25.6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32.6	4.5	28.1	49.4	14.6	3.4	18.0
	10~20명 미만	(196)	42.3	0.0	42.3	40.3	16.3	1.0	17.3
	20~30명 미만	(92)	40.2	4.3	35.9	40.2	17.4	2.2	19.6
	30명 이상	(123)	42.3	1.6	40.7	32.5	24.4	0.8	25.2

12)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

-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분쟁조정 의뢰에 대한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사소송(31.4%), 정부 신고(18.6%), 직접 시정요구(12.2%)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분쟁조정 의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분쟁조정 의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40억 미만, 40~100억 미만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분쟁조정 의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 미만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5]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

〈표 18〉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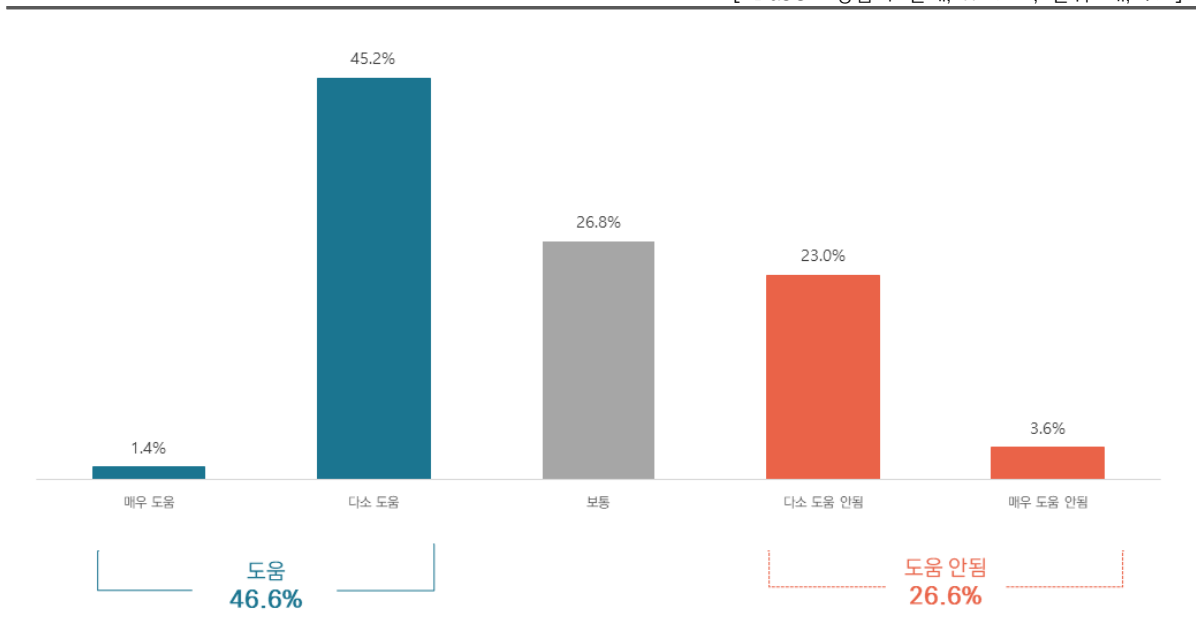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분쟁조정 의뢰	민사소송	정부 신고	직접 시정요구	
[전체]	(500)	37.8	31.4	18.6	12.2	
주력업종	화학	(57)	36.8	38.6	17.5	7.0
	고무/플라스틱	(6)	83.3	16.7	0.0	0.0
	금속/비금속	(87)	35.6	29.9	25.3	9.2
	전기/전자	(76)	23.7	42.1	17.1	17.1
	기계/설비	(205)	42.4	25.9	15.6	16.1
	자동차	(33)	30.3	36.4	24.2	9.1
	조선	(3)	100.0	0.0	0.0	0.0
	기타	(33)	42.4	33.3	24.2	0.0
매출액	10억 미만	(83)	48.2	25.3	13.3	13.3
	10~20억 미만	(119)	39.5	23.5	24.4	12.6
	20~40억 미만	(98)	30.6	38.8	19.4	11.2
	40~100억 미만	(114)	36.8	37.7	13.2	12.3
	100억 이상	(86)	34.9	31.4	22.1	11.6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32.6	44.9	12.4	10.1
	10~20명 미만	(196)	43.4	28.6	14.3	13.8
	20~30명 미만	(92)	33.7	26.1	30.4	9.8
	30명 이상	(123)	35.8	30.1	21.1	13.0

13) 동의를결제도 도입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 동의를결제도 도입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6.6%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26.6%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소 도움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26.8%), 다소 도움 안됨(23.0%), 매우 도움 안됨(3.6%), 매우 도움(1.4%)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6] 동의를결제도 도입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표 19〉 동의를결제도 도입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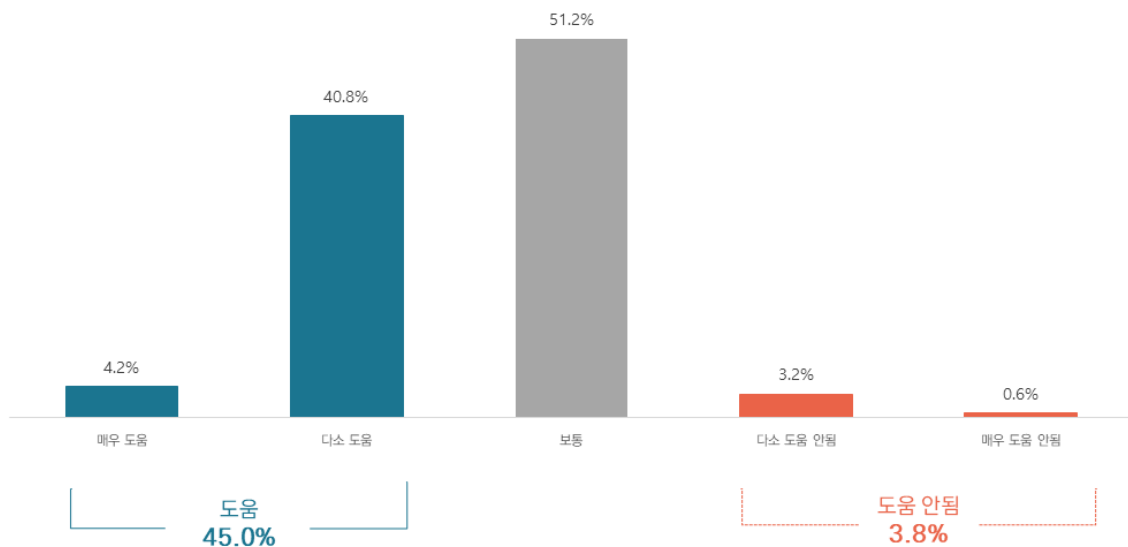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다소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전 체]	(500)	46.6	1.4	45.2	26.8	23.0	3.6	26.6	
주력업종	화학	(57)	45.6	0.0	45.6	26.3	24.6	3.5	28.1
	고무/플라스틱	(6)	83.3	0.0	83.3	0.0	16.7	0.0	16.7
	금속/비금속	(87)	47.1	2.3	44.8	29.9	20.7	2.3	23.0
	전기/전자	(76)	44.7	1.3	43.4	32.9	18.4	3.9	22.4
	기계/설비	(205)	50.7	1.5	49.3	21.5	23.9	3.9	27.8
	자동차	(33)	33.3	3.0	30.3	45.5	18.2	3.0	21.2
	조선	(3)	66.7	0.0	66.7	0.0	33.3	0.0	33.3
	기타	(33)	30.3	0.0	30.3	27.3	36.4	6.1	42.4
매출액	10억 미만	(83)	61.4	2.4	59.0	18.1	18.1	2.4	20.5
	10~20억 미만	(119)	47.1	3.4	43.7	26.1	23.5	3.4	26.9
	20~40억 미만	(98)	37.8	1.0	36.7	31.6	25.5	5.1	30.6
	40~100억 미만	(114)	44.7	0.0	44.7	27.2	21.9	6.1	28.1
	100억 이상	(86)	44.2	0.0	44.2	30.2	25.6	0.0	25.6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48.3	2.2	46.1	25.8	25.8	0.0	25.8
	10~20명 미만	(196)	53.6	2.0	51.5	19.9	20.9	5.6	26.5
	20~30명 미만	(92)	42.4	1.1	41.3	30.4	21.7	5.4	27.2
	30명 이상	(123)	37.4	0.0	37.4	35.8	25.2	1.6	26.8

□ 조사 소멸시효 관련

14) 조사 소멸시효 확대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 조사 소멸시효 확대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5.0%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도움(40.8%), 매우 도움(4.2%), 다소 도움 안됨(3.2%), 매우 도움 안됨(0.6%)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3%로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의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7] 조사 소멸시효 확대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표 20〉 조사 소멸시효 확대시 피해 중소기업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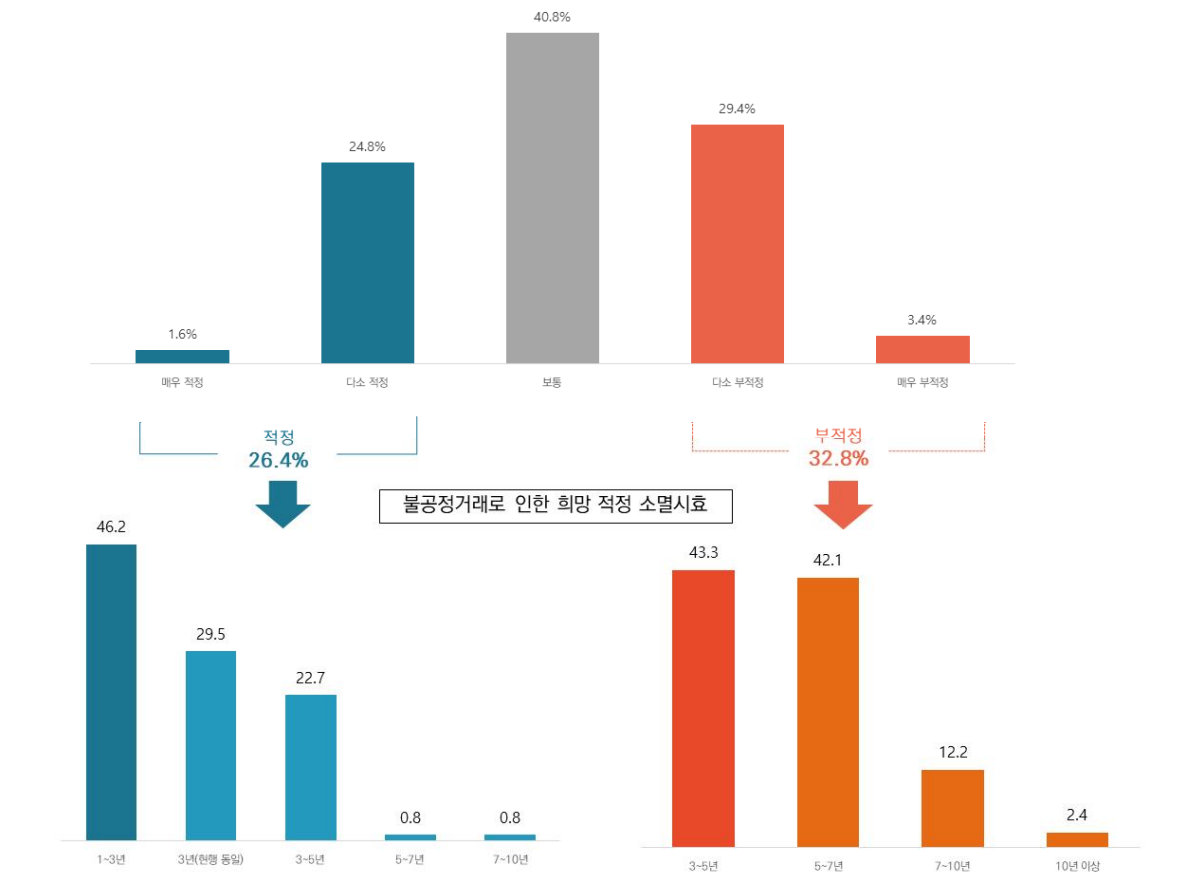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다소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전 체]	(500)	45.0	4.2	40.8	51.2	3.2	0.6	3.8	
주력업종	화학	(57)	43.9	0.0	43.9	52.6	3.5	0.0	3.5
	고무/플라스틱	(6)	83.3	16.7	66.7	16.7	0.0	0.0	0.0
	금속/비금속	(87)	40.2	2.3	37.9	55.2	3.4	1.1	4.6
	전기/전자	(76)	50.0	7.9	42.1	47.4	1.3	1.3	2.6
	기계/설비	(205)	43.9	4.4	39.5	52.2	3.4	0.5	3.9
	자동차	(33)	51.5	9.1	42.4	45.5	3.0	0.0	3.0
	조선	(3)	33.3	0.0	33.3	66.7	0.0	0.0	0.0
	기타	(33)	42.4	0.0	42.4	51.5	6.1	0.0	6.1
매출액	10억 미만	(83)	45.8	4.8	41.0	53.0	1.2	0.0	1.2
	10~20억 미만	(119)	41.2	2.5	38.7	52.9	4.2	1.7	5.9
	20~40억 미만	(98)	45.9	5.1	40.8	48.0	6.1	0.0	6.1
	40~100억 미만	(114)	44.7	3.5	41.2	52.6	1.8	0.9	2.6
	100억 이상	(86)	48.8	5.8	43.0	48.8	2.3	0.0	2.3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48.3	4.5	43.8	51.7	0.0	0.0	0.0
	10~20명 미만	(196)	45.4	3.1	42.3	52.0	1.5	1.0	2.6
	20~30명 미만	(92)	44.6	5.4	39.1	45.7	9.8	0.0	9.8
	30명 이상	(123)	42.3	4.9	37.4	53.7	3.3	0.8	4.1

15) 현행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소멸시효 적정 의견

- 현행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소멸시효 적정 의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났으며 부적정하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부적정(29.4%), 다소 적정(24.8%), 매우 부적정(3.4%), 매우 적정(1.6%) 순으로 나타남
-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소멸시효가 부적정하다는 응답(32.8%)의 희망 적정 소멸시효는 3~5년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7년(42.1%), 7~10년(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40.8%로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에서는 부적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8] 현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소멸시효 적정 의견

〈표 21〉 현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소멸시효 적정 의견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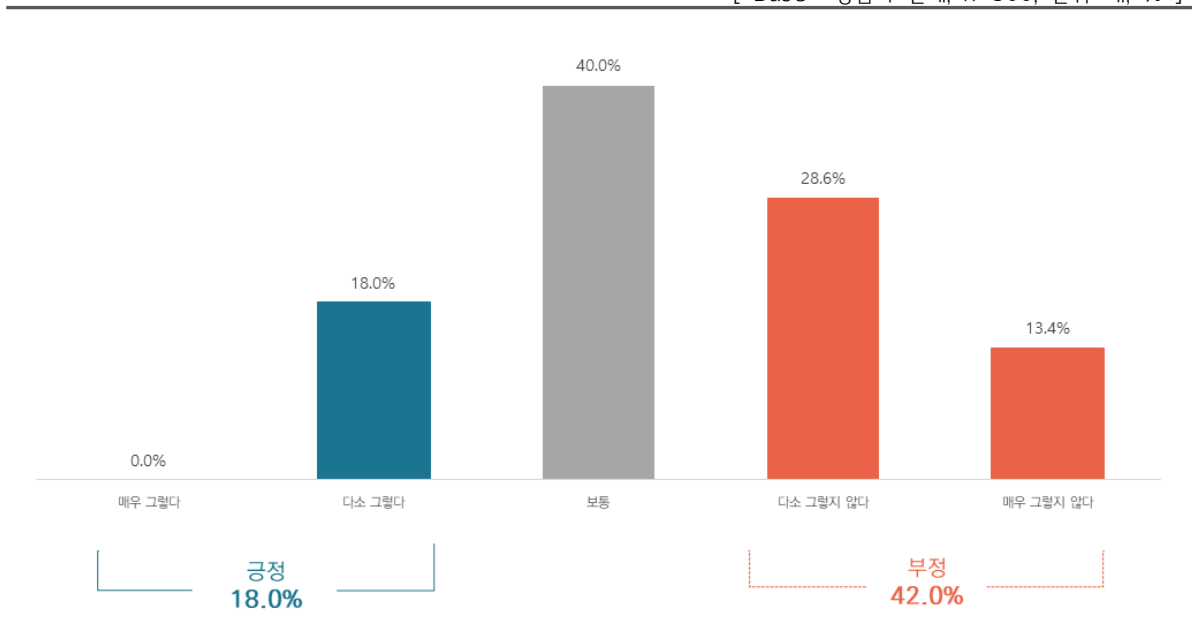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부적정	
			매우 적정	다소 적정		다소 부적정	매우 부적정		
[전 체]	(500)	26.4	1.6	24.8	40.8	29.4	3.4	32.8	
주력업종	화학	(57)	22.8	1.8	21.1	36.8	36.8	3.5	40.4
	고무/플라스틱	(6)	16.7	0.0	16.7	50.0	33.3	0.0	33.3
	금속/비금속	(87)	27.6	1.1	26.4	44.8	25.3	2.3	27.6
	전기/전자	(76)	40.8	0.0	40.8	32.9	25.0	1.3	26.3
	기계/설비	(205)	20.0	2.4	17.6	44.4	31.2	4.4	35.6
	자동차	(33)	30.3	3.0	27.3	42.4	21.2	6.1	27.3
	조선	(3)	33.3	0.0	33.3	66.7	0.0	0.0	0.0
	기타	(33)	33.3	0.0	33.3	27.3	36.4	3.0	39.4
매출액	10억 미만	(83)	28.9	1.2	27.7	44.6	24.1	2.4	26.5
	10~20억 미만	(119)	26.1	0.8	25.2	42.0	28.6	3.4	31.9
	20~40억 미만	(98)	24.5	4.1	20.4	35.7	35.7	4.1	39.8
	40~100억 미만	(114)	29.8	0.9	28.9	38.6	26.3	5.3	31.6
	100억 이상	(86)	22.1	1.2	20.9	44.2	32.6	1.2	33.7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33.7	1.1	32.6	33.7	27.0	5.6	32.6
	10~20명 미만	(196)	23.0	1.0	21.9	42.9	30.6	3.6	34.2
	20~30명 미만	(92)	27.2	3.3	23.9	37.0	33.7	2.2	35.9
	30명 이상	(123)	26.0	1.6	24.4	45.5	26.0	2.4	28.5

□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 지원 정책

16)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피해지원 원할 의견

-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피해지원 원할 의견에 대해 물어본 결과, 피해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났으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2.0%로 나타남
-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그렇지 않다(28.6%), 매우 그렇지 않다(13.4%), 다소 그렇다(18.0%)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66.7%로 다른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40~100억 미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19]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피해지원 원할 의견

〈표 22〉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피해지원 원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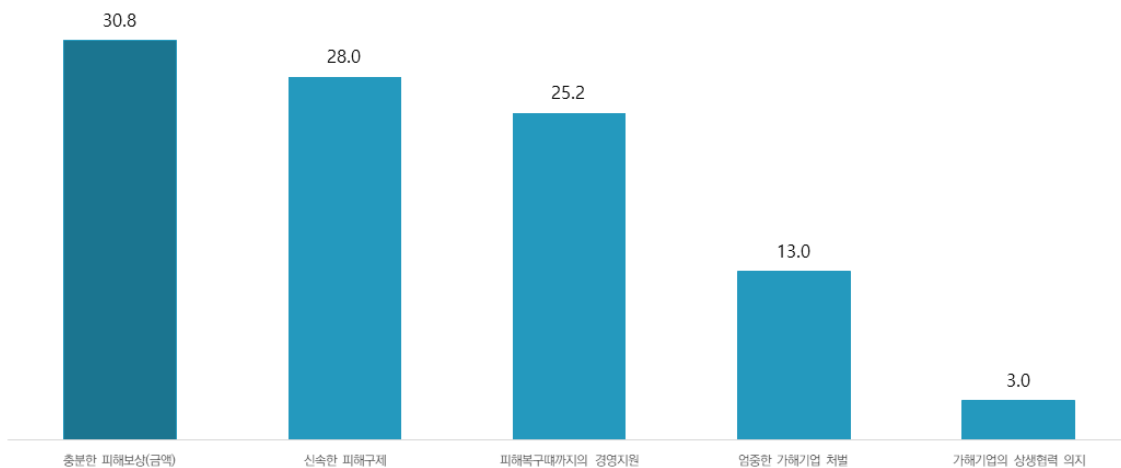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	
[전 체]	(500)	18.0	0.0	18.0	40.0	28.6	13.4	42.0	
주력업종	화학	(57)	15.8	0.0	15.8	43.9	22.8	17.5	40.4
	고무/플라스틱	(6)	66.7	0.0	66.7	16.7	16.7	0.0	16.7
	금속/비금속	(87)	16.1	0.0	16.1	40.2	27.6	16.1	43.7
	전기/전자	(76)	19.7	0.0	19.7	36.8	26.3	17.1	43.4
	기계/설비	(205)	19.5	0.0	19.5	38.0	29.8	12.7	42.4
	자동차	(33)	12.1	0.0	12.1	45.5	39.4	3.0	42.4
	조선	(3)	0.0	0.0	0.0	100.0	0.0	0.0	0.0
	기타	(33)	12.1	0.0	12.1	45.5	33.3	9.1	42.4
매출액	10억 미만	(83)	20.5	0.0	20.5	31.3	31.3	16.9	48.2
	10~20억 미만	(119)	18.5	0.0	18.5	42.9	22.7	16.0	38.7
	20~40억 미만	(98)	23.5	0.0	23.5	38.8	25.5	12.2	37.8
	40~100억 미만	(114)	14.0	0.0	14.0	34.2	40.4	11.4	51.8
	100억 이상	(86)	14.0	0.0	14.0	53.5	22.1	10.5	32.6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21.3	0.0	21.3	37.1	27.0	14.6	41.6
	10~20명 미만	(196)	17.3	0.0	17.3	38.8	28.1	15.8	43.9
	20~30명 미만	(92)	21.7	0.0	21.7	42.4	25.0	10.9	35.9
	30명 이상	(123)	13.8	0.0	13.8	42.3	33.3	10.6	43.9

17)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시 중요한 점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시 중요한 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충분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응답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복구 때까지의 경영지원(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력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충분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무/플라스틱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전자, 기계/설비에서는 피해복구 때까지의 경영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20~40억 미만에서 충분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응답이 다른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피해복구 때까지의 경영지원에 대한 응답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충분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 미만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그림 20]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시 중요한 점

〈표 23〉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시 중요한 점

[Base : 응답자 전체, n=500,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충분한 피해 보상(금액)	신속한 피해 구제	피해복구 때까지의 경영 지원	엄중한 가해 기업 처벌	가해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전 체]	(500)	30.8	28.0	25.2	13.0	3.0	
주력업종	화학	(57)	38.6	31.6	14.0	14.0	1.8
	고무/플라스틱	(6)	16.7	83.3	0.0	0.0	0.0
	금속/비금속	(87)	35.6	31.0	20.7	11.5	1.1
	전기/전자	(76)	28.9	21.1	34.2	11.8	3.9
	기계/설비	(205)	25.4	27.3	28.3	15.6	3.4
	자동차	(33)	33.3	24.2	30.3	6.1	6.1
	조선	(3)	66.7	33.3	0.0	0.0	0.0
	기타	(33)	39.4	27.3	18.2	12.1	3.0
매출액	10억 미만	(83)	31.3	36.1	18.1	9.6	4.8
	10~20억 미만	(119)	30.3	25.2	21.8	18.5	4.2
	20~40억 미만	(98)	24.5	28.6	30.6	12.2	4.1
	40~100억 미만	(114)	38.6	25.4	28.9	6.1	0.9
	100억 이상	(86)	27.9	26.7	25.6	18.6	1.2
종업원 수	10명 미만	(89)	32.6	33.7	18.0	12.4	3.4
	10~20명 미만	(196)	29.6	27.6	27.0	13.3	2.6
	20~30명 미만	(92)	29.3	22.8	28.3	14.1	5.4
	30명 이상	(123)	32.5	28.5	25.2	12.2	1.6